

중국의 시각에서 본 한-중 FTA와 우리기업 관련 시사점

윤인채 관세협력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韩中自贸协定 双方受益多多

상호이익이 매우 크다



2015년 3월 9일자 지에팡진바오(解放軍報 : 중국 군부에 영향력 있는 신문)는 지난 2월 25일 최종타결된 한-중 FTA협상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경제지도 아닌 군부 신문까지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하여 한-중 FTA를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큰 소식이라는 반증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중국은 한-중 FTA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예의 그 많은 연구부서에서 효과분석에 대한 무수한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이런 연구들을 활용하여 앞으로 많은 중국기업들이 동 FTA를 이용한 우리시장 또는 물류업 등에 활발히 진출할 것이므로 우리도 기업별 맞춤형 FTA안내서 또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지에팡진바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중국의 시각에서 보는 한-중 FTA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그리고 한-중 관세당국간에 준비하고 있는 조치들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01 한-중 FTA 협정의 의의 (중국의 시각)

동 협정은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규제 등 17개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협정이다. 경쟁정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경제 무역에 대한 내용과 규정으로 양국의 무역자유화 비율은 세목으로 90%초과, 무역액 85%를 차지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한 국가 중 무역액 최대, 혜택범위가 전방위적인 FTA협정이다.

따라서 한-중 자유무역구의 구축(FTA)¹⁾은 양국은 물론 아태지역 일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에의 영향

한국으로 보자면, 최근 몇 년간 세계경제의 위축에 따라 수출부진과 국내소비도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문제가 조금 개선된 기미도 있었으나 한국의 경제규모가 한계가 있어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근본 대책은 기타 경제주체와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2010년 한국정부와 EU가 FTA를 체결했고,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중국은 세계 제2대 경제주체이고 한국의 이웃나라로서 2007년 이래 한국의 최대무역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초월하여 중국의 제1무역 역조국(수입국)이 되었다.

한국의 정책가들은 중국의 굴기(崛起, 융성)를 한국의 발전기회로 삼았다. 한중양국은 FTA 합동연구를 근거로 FTA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30% 증가하며, 방직업, 자동차제조업, 석유화학공업 등이 중국에서 수익이 날 것이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3%까지 상승할 것을 전망하였다. 이는 한-미 FTA의 0.56%, 한-EU FTA의 1.02%로 볼 때 한국에 돌아오는 수혜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1) 중국은 FTA를 자유무역구 구축(自由贸易区的建成)이라 표현함.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개념을 초월한 지역통합 개념으로 보는 적극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음.

중국에의 영향

한-중 FTA는 중국에도 매우 의의가 크다. 현재 중국이 처한 수출시장은 위축되고 있고, 경제성장도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불균형, 환경문제 돌출 등의 도전을 받고 있다. 한-중 FTA는 중국이 한-중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이용하기에 유리하며, 한국의 시장, 자금, 기술, 발전경험 등을 빌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동시에 경제구조개선과 산업의 고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성장 엔진과 아태지역일체화의 '항도'²⁾ 역할이 점점 두드러졌다. 2015년, 중국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One road)³⁾ 전략구상은 실제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 전략의 특징은 이웃나라의 발전이 중국발전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으로써 "호혜(互惠)"와 "상호이익(Win-Win, 双赢)"을 통해 세계각국이 함께 세계경제질서 개혁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이는 소수의 경제발달국가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및 발전중인 개도국 국가에게도 유리할 것이다. 또한 신흥시장국가에 같이 속하면서 이웃나라인 한-중 양국의 FTA체제 구축은 "윈-윈" 원칙의 실천적 결정체이며,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제3국에의 영향

한-중 FTA는 아태지역일체화 촉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태지역과 한-중-일 3국의 경제생산량은 전세계의 21.9%를 점하며, 아시아전체의 70%이지만 상호 무역의존도는 EU나 북미 NAFTA에 훨씬 못미친다. 이런 현상은 지역시장 통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은 한-중-일 FTA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는 바, 한-중 FTA의 타결은 3국간 FTA체결에 경험과 동력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2) 중국식 표현은 "领头雁"(선두에선 기러기)

3) 과거 당나라때 융성했던 무역왕래의 중심지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一帶는 해상을 통한 동남아 등 일대와 연계, 一路는 과거 시안(西安)에서 로마까지 연결되었던 대상통로외에 몽골 러시아를 포함한 접경육로를 포함하는 육로를 통한 연계를 말함.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이와 연계된 국가는 모두 64개국임.(한국 제외)

02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한-중 FTA는 FTA의 체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FTA의 일반적 경제효과에 따라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동태적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⁴⁾

관세와 무역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우리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등 경제발전 전략과 맞물려서 활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이다.

중국은 지난 3월 개최된 2015년 양회에서 지난 해 정책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중국 경제는 '뉴노멀(신경제질서 '新常态')로 진입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대일로', '인터넷플러스' 등 핵심 발전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하 KMI 중국리포트(15-4호, '15. 4. 7)에서 분석한 올 해 양회에서 드러난 중국의 일련의 정책들이 한국 업계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어떤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지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우선,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제2 개방'을 의미하며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국가와 함께 상의하고(共商), 함께 건설하고(共建), 함께 나누는(共享) 3공(三共)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구상은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⁵⁾ 가입 및 중국과의 FTA체결과 더불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한국의 GDP는 2.4~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만수 2008, 4).

5) AIIB는 정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지역 다자간 개발 기구로서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본부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다.

특히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 및 연선국가의 내수시장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 활력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진입장벽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둥성은 '일대일로' 해륙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항만조건도 좋기 때문이다. 또한 칭다오는 국내 최초로 해륙철도 복합운송(海铁联运)이 시작되는 항구이다.

한국, 일본으로 가는 33개 직항 항로, 동남아와 남아시아로 가는 24개 직항 항로가 있다. 또한, 르자오항은 중국의 1급 대외개방 항구인데 보세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만 톤 급 선박이 입항 가능하고 석탄 하역 능력이 높은 편이다. 둘째, 산둥성은 한-중 양국경제무역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국의 대중 투자총액의 40%를 차지했으며, 수출입 활동은 양국 무역 총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손제이에산둥성 정협 부주석에 따르면 한-중 철도 페리를 통한 잠재적 운송량이 2030년에 2,762만 톤에 도달하고 단방향 여객 수송량은 약 1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무원이 승인한 「산둥반도 블루 경제구 발전 계획」에서의 중심지역인 옌타이 지역의 옌타이철도페리 (烟大铁路渡轮) 시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중 철도 페리 건설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 동서를 잇는 철도 물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어 유라시아 물류대동로 건설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플러스와 전자상거래의 발전

또한 올해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터넷 경제 규모에서 전자상거래, 게임, 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2천 160억 위안(약 38조 1천억원)에 달했으며, 이용자는 1천 800만 명에 육박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18년 1조 위안(약 176조 4천 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량제품을 발굴함과 동시에 중국 등의 해외로 진출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매활로를 개척해 주어야 하며, 한국의 대중(对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⁶⁾

03

한-중 관세당국간 협력활동

지난 3,23일(월)~25일(수)간 중국 천진에서는 원산지데이터 전자교환시스템 (EODES)⁷⁾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장급 실무회의가 있었다. 동 회의에서는 양측은 한-중 FTA체결 및 시행을 대비하여 양국 세관간 원산지확인 간소화를 위한 원산지데이터 전자교환시스템을 구축하여 FTA물품의 신속통관 등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만약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의 노력이 원만히 성공하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① 무역원활화 촉진(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효율화 및 단순화)
- ② 서류 원산지증명서 세관제출 원칙적 생략

최근 중국 칭다오(靑島) 해관은 2014년에 중-대만 경제협력협약(ECFA) 실시 4년째를 맞아 칭다오 관내 1년간 ECFA관련 수입화물은 9.64억위안(한화 약

6) 2014년 제10차 KMI 상해 CEO 물류포럼 자료.

7)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1,735억원)이고 감면세액은 8,325.5만위안(한화 약 149억 8천만원)에 달해 전년대비 각 11%, 4%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칭다오해관은 적극적으로 통관환경을 개선 ECFA 상품 전담창구설치, ECFA 화물 우선 신고접수, 통관수속 등 지원을 하였고, 통관 애로센터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통관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동 제도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14년 4월 "중-대만 세관간 전자 데이터교환시스템"이 정식 운영되면서, 중국과 대만간 원산지증명서의 전자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됨으로써 전산망에서 관련 데이터의 진실성이 확보되어 허위증명서의 근절과 ECFA화물의 통관 속도가 빨라져서 기업 통관비용과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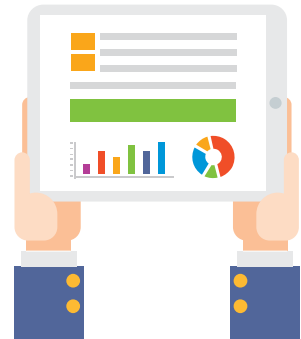
중국세관은 현재 양국간 구축을 준비중인 '원산지증명서데이터 전자적 교환 시스템'이 대중국 수출량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부디 동 협상이 원만히 성공하여 우리기업들이 향후 중국과의 FTA발효후에 중국 해관의 원산지증명서 심사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스파게티 볼' 효과의 애로를 겪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한-중 FTA와 주요산업별 대응방안



오대원 교수
한남대학교 중국경제통상학과



01 머리말

한-중 양국은 2004년 9월 통상장관회담의 FTA 공동연구 추진 합의 이후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2014년 11월 10일 협상타결이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현재 13억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입국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기존 FTA협정에 비해 의의와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며, 한-EU 및 한-미 FTA 등과 함께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의 의미를 지닌다. 한-중 FTA는 우리의 수출시장 확보와 수입을 통한 원자재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나아가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2월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면서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방향에서는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 선정하여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의 주요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한-중 FTA의 주요산업별 영향

가. 전기 전자산업

〈표 1〉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전기·전자제품들의 가중평균 관세율¹⁾을 보여준다. 산업용전자제품(MTI 81)과 전자부품(MTI 83)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중국에 비해 높기는 하나 품질과 기술면에서 경쟁력이 강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자부품(MTI 83) 분야는 반도체(MTI 831) 등과 같은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부품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한-중 FTA가 체결되더라도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최대 무역흑자업종으로서 교역규모가 커서 한-중 FTA의 영향은 비교적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와 같은 경우에는 한-중 FTA는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1 전자·전기제품(MTI 8)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산업용전자제품(MTI 81)	2.5	2.8	5.5	1.4	2.3	1.3
통신기기(MTI 811, 812)	0.5	0.4	0.6	0.1	0.1	0.1

1) 가중평균관세율이란 해당국의 품목별 실질관세율과 해당품목별 수입규모를 가중치로 이용하여 계산한 환율을 의미한다.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가정용전자제품(MTI 82)	4.1	4.4	4.5	5.3	22.9	5.7
전자부품(MTI 83)	0.4	0.2	0.2	0	0	0
중전기(MTI 84)	6.0	6.6	6.7	4.1	4.2	3.9
전선(MTI 85)	1.6	1.8	1.8	1.6	2.1	1.5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 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가정용전자제품(MTI 82)의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아 한-중 FTA가 시행되면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추격으로 가정용전자제품의 TS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대중국 경쟁력이 매우 낮아 무역적자를 시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중 FTA가 시행되면 중국의 외자기업이 생산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원산지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의 백색가전협회는 한-중 FTA를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양평섭, 2013, p.70).

중전기(MTI 84)의 경우는 한국의 관세가 중국보다 높고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중 FTA가 시행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중 FTA로 4%대인 비교적 높은 중국의 관세율이 철폐되면 수출도 어느 정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선(MTI 85)의 경우에는 양국의 관세율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한-중 FTA가 시행되면 수출입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양국 모두 현재의 관세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최근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과 TS지수가 가장 낮아 대중국 경쟁력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으로 전망된다.



나. 철강 및 비철금속산업

표 2 철강금속산업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철강제품(MTI 61)	0.9	0.7	0.8	5.6	5.4	5.6
비철금속제품(MTI 62)	5.0	4.9	5.1	3.4	4.0	3.0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 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표 2〉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철강금속제품들의 가중평균 관세율을 볼 수 있다. 철강제품(MTI 61)의 경우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중국의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철강제품 가운데 고부가가치 품목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제품과의 단가 격차가 커서 관세 인하효과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국 수입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근우, 2012, p.97).

특히, 향후 중국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고 공급능력이 확대될 경우 수출증대폭도 제한적일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FTA로 인한 철강제품 수요산업의 수출증대로 인한 간접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현재 중국의 철강산업은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하여 어느 정도 자국시장 보호가 필요하므로, 한-중 FTA에서 민감산업으로 지정하여 단계별 관세철폐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한-중-일 FTA보다는 한-중 FTA를 선호하고 있어 한-중 FTA가 시행되면 일본산 수입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어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비철금속제품(MTI 62)의 경우에는 비교적 교역규모가 작지만 계속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중국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높아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이 공급부족으로 내수충족을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생산과 공급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어서 수입증가폭은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양평섭, 2013, pp.69~70).

다. 섬유산업

표 3 섬유류의 한중 관세율 비교

년 도	관세율(가중평균, %)	
	한 국	중 국
2010	9.8	8.3
2011	9.8	8.4
2012	9.9	8.8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도,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표 3〉에서 최근 한국과 중국의 섬유류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양국의 관세율이 모두 높은 편이나 중국보다 한국의 관세율이 약간 높은 편이어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섬유류의 관세가 철폐되면 섬유류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중국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TSI지수가 높아 대중국 경쟁력이 높은 섬유원료(MTI 41)나 직물(MTI 43)의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섬유원료는 주로 폴리에스텔섬유(MTI 4111), 아크릴섬유(MTI 4112), 기타 합성섬유(MTI 4119) 등과 같은 인조섬유(MTI 411)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국 TSI지수가 매우 낮아 수입특화(비교열위)를 보이고 있는 섬유사(MTI 42)와 섬유제품(MTI 44)의 경우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입이 급증하면 국내의 관련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 브랜드, 문화, 소비자 선호, 유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도 디자인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라. 기계산업

〈표 4〉에서 최근 3년간 한국과 중국의 기계류 가중평균관세율을 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기계 제품들의 관세율이 비슷한 수준이며 양국 모두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국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기계류 제품의 수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대중국 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기계류(MTI 7)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기계제품(MTI 71, 72, 73)	6.4	6.3	6.2	5.8	6.5	6.0
자동차부품(MTI 742)	6.3	6.8	7.0	14.0	14.9	13.4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그러나 그동안의 무역규모와 기계류에 대한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을 고려하면 수출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류제품은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어 중국의 관련업계에서는 한-중 FTA를 우려하고 있다(양평섭, 2013, p.70).

특히,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대중국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한국인의 국산차 및 국산부품 선호 경향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 농림수산업

표 5 농축수산물(MTI 0)의 한·중 관세율 비교

품 목	한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중국의 관세율(가중평균, %)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농산물(MTI 01)	26.4	23.9	18.9	16.8	20.2	15.1
축산물(MTI 02)	13.0	13.2	16.8	8.2	8.5	8.5
임산물(MTI 03)	6.0	6.3	5.0	2.6	2.4	3.8
수산물(MTI 04)	13.0	13.2	16.8	8.2	8.5	8.5

자료 : 관세청, 중국해관수출입세칙, 각 년호, 출처 : 이진면 외(2013), p.71, p.77.

〈표 5〉는 최근 농림수산물(MTI 0)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가중평균 관세율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모든 품목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높은 상태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낮아 수입역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이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동식물검역조치로 신선 과일, 신선 채소 및 신선 육류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철폐되고 동식물에 대한 검역조치가 해제된다면, 농림수산물의 대중국 무역역조는 이 보다 훨씬 심각하게 될 것이며, 국내의 관련 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3 제조업 및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가. 제조업 대응방안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산업용전자제품(MTI 81), 전자부품(MTI 83), 반도체(MTI 83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MTI 836), 섬유원료(MTI 41), 기초산업기계(MTI 71), 정밀기계(MTI 73), 자동차부품(MTI 742) 등과 같은 대부분의 제조업제품들은 대중국 경쟁력이 높아 수출특화 상태에 있으며, 관세율에 있어서도 불리한 것이 없어, 한-중 FTA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국 비교우위를 유지하며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의 추격으로 이미 비교우위를 상실하였거나 상실해 가고 있는 가정용전자제품(MTI 82), 전선(MTI 85), 섬유사(MTI 42), 섬유제품(MTI 44), 철강제품(MTI 61) 등과 같은 산업들은 한-중 FTA 체결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입이 증가될 경우 국산품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특화품목이나 수평분업관계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물론이고 대중국 수출특화품목으로 분류된 수혜산업이라 할지라도 FTA가 체결된 이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의 중국산 경쟁상품이 밀려들어올 경우 피해는 예상 밖으로 심각할 수도 있다.



한편, 한-중 FTA로 인한 우리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가 지닌 비교우위요소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중국의 기업들과 산업협력 구도를 유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중 FTA가 시행되면 그동안 관세 덕분에 버티어 온 우리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대중국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 못한 섬유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나. 농림수산업 대응방안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과 수입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략적인 품목들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의 경우 고품질·안전성 등 강점을 활용하고, 고비용 생산구조·고령화 등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 농업의 전체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

국산농식품의 '안전성' 이미지에 기반하여, 친환경·안전 농식품의 對中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중국 소비시장 조사 및 對中 수출 전략 상품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산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종개발, 재배기술, 규모화, 시설현대화, 생력화, 수확 후 관리기술, 소비자 지향형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 유관기관 및 농민들이 협력하여 지역별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과도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신선도 유지 등 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aT센터, KOTRA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 중국 주요 성(省)별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국 내 유통망을 확충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유통업체의 중국 내 점포망을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고급 백화점 등 유통회사와 제휴하여 우리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고소득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정부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알리바바·티엔마오·위마이왕 등)과 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개설하여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선 현대화, 자원관리 등을 통해 어선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양식품목을 중심으로 친환경·대량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시장 기반확충을 위해 수산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산업 통합마케팅 및 체계적인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 밖에도 중국 소비자들의 고급화 선호 취향을 감안하여 광고와 마케팅 전략을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는 최고 품질의 유기농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농수산물의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출지원센터, 앵커숍 운영 등 현지 지원조직을 확충하고, 수출용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재외 공관 활용 알선, 지역 특산물 기획마케팅 등을 포함하는 K-seafood project 추진으로 우리 수산물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전략

정환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01

한-중 FTA 효과의 독특성

한-중 FTA의 업종별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분야를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관세철폐 효과,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마지막으로 밸류체인(value-chain) 활성화 효과이다. 맨 앞의 관세철폐 효과는 모든 FTA에 공통으로 중요한 반면, 두 번째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한-중 FTA에서 더욱 중요해 지며, 마지막 밸류체인 활성화 효과는 한-중 FTA에서만 두드러지게 중요한 요인이다.

첫번째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이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후 20년 이내에 대다수 무역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발효후 20년이 되면 한국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으로 91%가 철폐될 예정이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가 철폐된다. 또 10년 이내에 양국 모두 65% 이상의 관세 철폐 예정이다. 발효 10년째가 되면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 수입액 기준으로 77%가 철폐될 예정이며,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 수입액 기준으로 66%가 철폐된다.

또 하나는 비관세장벽 제거/완화 효과이다. 사실 비관세장벽은 어느 국가나 있고, 모든 FTA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의제이다. 그러나 한-중 FTA에서 비관세장벽 완화가 각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경제체제 전환·구축의 진행, 거대 규모와 지역별 다양성으로 인해 대중국 무역 및 투자시 비관세장벽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한-중 FTA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밸류체인(value-chain) 활성화 효과이다.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의 비중은 '14년 현재 75% 수준이며, 가공무역은 51.8%에 이른다. 한-중간에 밸류체인 즉 분업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뜻이다. 밸류체인은 수교('92년) 이후 양국 공동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이러한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한-중 FTA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인정 약속 역시 밸류체인 측면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다. 한-중 FTA에서 양국은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할 경우 한국산 대우를 해주기로 한 품목을 310개(HS 6단위) 지정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해 늘릴 수 있도록 약속했다.

02

한-중 FTA의 업종별 영향

대중 수출품목을 11개 업종, 세부적으로는 17개 업종으로 나누어 상기 세가지 영향을 검토해 보면 대략 <표1>과 같이 요약된다.

대중국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분야는 세부업종(전자와 전기)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전자분야의 경우 원래부터 무관세 품목(정보산업 무역협정(ITA)에 따른 무관세)이 많아 관세철폐 효과는 크지 않으나 비관세장벽 완화 성과(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상호인정 추진)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밸류체인이 가장 활성화 된 업종 특성상 향후 원산지규정, 양국의 FTA 네트워크 활용, 역외가공지역(OPZ) 활용등을 통한 밸류체인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당초 우리측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전기분야에서는 양측의 관세를 장기 철폐 하기로 한 점 외에 전자분야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한-중 FTA에서 개방이 덜 이루어진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 업종이지만 완성차와 자동차부품간에 의미 있는 차이도 발견된다. 일단 승용차는 양국 모두 관세철폐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상용차(버스, 화물차)는 15년 이상 장기철폐를 약속했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양국 모두 대체로 15년 전후의 장기 관세철폐를 약속했으나 단기 철폐 품목도 적지 않고 자동차부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 약속이 이루어져 무역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한-중 양국을 오가는 국제무역이 상당 부분(특히 와이어링 하니스 등) 이루어져 있고, 역외가공지역 생산도 가능해 밸류체인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과정에서 우리 관련업계의 우려가 많이 표출되었던 섬유·의류분야는 중국측의 조기 관세개방이 약속되어 우리의 고부가가치 섬유 및 의류 수출에 유리할 전망이고, 비관세장벽 완화도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OEM 등 밸류체인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미 아시아지역내 산업 클러스터 형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역외가공지역내 생산에 유리해 밸류체인 활성화에도 유리할 전망이다.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업종은 제품 특성상 비관세장벽이나 밸류체인 활성화와 큰 관계가 없다. 이런 가운데 관세분야에서는 다소 상이한 관세 철폐가 약속되었다. 석유제품의 경우 중국은 대체로 15년의 장기 철폐를 약속했으나 기존 관세율 9%로 1.5%를 차지하며 대중수출의 1.5%를 차지하는 항공유의 즉시철폐가 약속되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파라지일렌, 텔레프탈산(TPA) 등 한국의 주력수출품이 철폐에서 제외되어 대체로 기대효과가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흡수성수지등 수출액이 크지 않으나 상당수 고부가가치 제품의 관세 조기철폐가 예정돼 있어 한국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등을 통해 대중수출을 도모할 여지는 커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에 무관세였던 철강업종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가 크지는 않으나 중국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중수출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상당수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철강 중간재의 중국 수입관세 철폐가 약속돼 있어 수출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알루미늄, 아연, 납등을 포함하는 비철금분야는 원자재 조달이 중요한 점을 감안, 한국보다 중국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관세개방을 수용했다. 이점에서 한국기업의 대중 수출에 다소 양호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기계로부터 산업기계, 공작기계, 기계요소(베어링 등)등을 다양한 세부 업종을 포괄하는 기계분야에서는 비관세장벽이나 밸류체인보다는 관세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건설기계(특히 굴삭기), 공작기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세부업종에서 실질적인 관세 개방이 이루어졌다.

기계분야 못지 않게 다양하지만 소비재와 중간재(생산재)가 섞여 있고, 한-중간에 분업구조가 형성된 화학분야에서는 관세철폐 효과,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 밸류체인 활성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의약, 광택제, 계면활성제, 도로·안료 등 분야에서 중국의 실질적인 관세철폐가 이루어졌다. 비관세장벽 역시 화장품, 의약품을 중심으로 여건 개선이 약속될 예정이다.

플라스틱·고무·가죽 업종 역시 관세와 비관세장벽 모두 대중무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세 분야에서는 가죽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이루어졌고 비관세장벽 여건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밸류체인 등이 모두 중요한 식품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와 동시에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세 철폐가 약속되었고 검역 등 수출애로 사항도 개선되고 있으며, 원산지규정 활용 등을 통한 한-중간 식품분야 밸류체인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역시 소비재이다. 중국은 승용차, 일부 가전제품 등 일부 내구소비재 분야에서 관세철폐를 하지 않기로 한 이외에 대부분 소비재 관세를 10년 전후에 걸쳐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중국내 인증 취득 및 인증상호 인정, 제품 표시 및 라벨링 등 비관세장벽 조치 관련 약속사항이 모두 우리 소비재의 중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수 소비재가 한-중간 분업구조하에서 생산되고 있고, 역외가공 인정 조치도 향유할 수 있어 소비재 분야의 밸류체인 활성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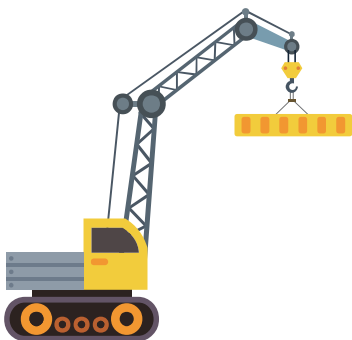


표 1 한-중 FTA의 업종별 수출효과

업종		수출비중 ('14)	수입비중 ('14)	무역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전기전자	전자	44.5	31.3	36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가공무역, ITA등으로 크진 않으나 효과 있음 •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 상호인정 등 수혜 • (V) 대표적 GVC 업종으로 활성화 전망
	전기	2.4	5.9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우리측 민감분야로 보호수준 높음(장기철폐) • (N) IECEE(국제전기기기 인증)상호인정 등 수혜 • (V) 일부 수혜 전망
자동차	승용차	1.2	0.0	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효과 없음, 상용차 장기철폐로 일부 수혜 • (N) 직접 수혜 별무이나 자동차부품 장벽 완화로 간접 수혜 가능 • (V) 자동차부품 통한 간접 수혜
	부품	4.4	1.4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일부 수혜, 대부분 장기 철폐 • (N)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등 수혜 예상 • (V) 원산지, 통관 등 통한 수혜 예상
섬유류	섬유	1.4	2.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한국 보호, 중국 개방 → 관세철폐 효과 유리 •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 (V) VC 활성화 업종으로 더욱 활성화 기대
	의류	0.3	3.9	-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민감분야, 중국 개방 확대로 우리기업 수혜 • (N) NTB 완화 및 경제협력 수혜 • (V) VC 활성화 업종으로 더욱 활성화 기대
석유·석유화학	석유제품	4.2	0.3	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중국 대체로 장기철폐(15년)이나 항공유(既 관세율 9%) 즉시철폐로 수혜 가능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석유화학	15.4	2.4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P-Xylene, TPA등 주력품목 중국 양허 제외로 관세철폐 효과 제한적이나 고부가가치 품목 개방수준 높아 향후 수혜 기대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철강		3.3	13.5	-7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한국은 무관세, 중국 관세철폐로 한국의 수출에 유리 • (N) 별무 관계 • (V) 한-중간 분업 재편에 유리
비철금속		1.6	1.8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한국측 민감분야, 중국측 고수준 개방 수용 → 다소 수혜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기계		9.6	11.4	3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상당 부분 중국관세 철폐, 우리측은 민감분야(기계요소) 보호 - (고수준 개방) 보일러, 펌프, 냉장고 부품, 버너, 히터, 측정기기 등 - (저수준 개방)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 (N) 별무 효과 • (V) 별무 효과

업종		수출비중 ('14)	수입비중 ('14)	무역수지 (억\$)	FTA 효과 (관세철폐(T), NTB 완화(N), VC 활성화(V))
화학		3.4	5.7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대체로 중국 고수준 관세 철폐 →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수준 개방) 의약, 광택제, 계면활성제, 도로·안료 등 - (저수준 개방) 비료, 화장품, 사진·영화재료 등 • (N) 상당수 소비재 포함 → NTB 완화 기대 • (V) 양국간 분업관계 재배치·활성화 전망
플라스틱·고무·가죽		2.4	2.9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세부업종별로 다르나 보통수준, 가죽분야 수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고무 보통수준, 가죽 고수준 개방 • (N) 업종 성격상 유리 전망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전망
농식품		0.6	2.5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한국 고수준 보호, 중국 보통수준 개방 → 다소 수혜 • (N) 검역 여건등 개선, 기술무역장벽 개선으로 유리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촉진
소비재	내구	0.7	2.0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 중국측 고수준 개방(상당수 10년 철폐) • (N) 업종 성격상 큰 폭 수혜 • (V) 한-중간 분업 활성화 및 재구성 촉진
	반내구	0.8	8.6	-66.0	
	비내구	1.3	1.6	3.8	

03 한-중 FTA 활용전략

이상 살펴본 한-중 FTA의 주요 업종별 영향 전망은 업종별 한-중 FTA 활용전략으로 이어진다. 우선 3가지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서는 각각에서 상응하는 활용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 관세철폐 효과를 겨냥해 기존에 관세 부담때문에 수출하지 않았던 제품의 수출을 강구(수출산업화)해 볼 수도 있고, 관세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품목으로 가공공정을 바꾸어 수출(공정변경)해 볼 수도 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국제 인증 인정, 상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제품 표시 및 라벨링 분야의 약속사항 활용 등을 적극 모색해 볼 수 있다. 세부 업종이나 품목별로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활용 분야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분야는 이번에 명시된 국제인증 상호수용 활용을 적극 모색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제품 표시 및 라벨링 관련 장벽 완화는 소비재 분야에서 우선 검토하는 편이 유리하다.



마지막 밸류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체결망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교차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 수도 있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 생산을 모색하거나, 일부지역에 검토·추진중인 한-중 FTA 시범협력지역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가지 가운데 일부만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서는 좀 더 몰두하여 기대효과 활용에 집중하는게 유리하다. 중국의 추가 관세개방이 이루어졌으나 비관세장벽, 밸류체인 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계분야에서는 관세철폐 효과 활용방안에 집중하는 동시에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가 급선무다.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라 한-중간 밸류체인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기계분야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철강분야도 기술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비철금속 분야에서도 한-중 FTA를 통한 관세철폐 효과 활용에 집중하는 방안이 지름길이다.

이상 3개 분야 활용전략의 실제 운용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섬유·의류, 화학, 플라스틱·고무·가죽, 농식품, 소비재 등 업종에서는 3가지 활용전략이 모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비철금속, 기계 등 업종은 대체로 관세철폐 효과 활용에 집중하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공작기계 등 중국의 관세 철폐폭이 크지 않고 비관세장벽 완화도 큰 의미가 없는 분야는 좀더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제품경쟁력 제고 등 고전적인 경쟁력 제고는 물론 중국투자 확대를 통한 현지 시장개척, 글로벌 및 중국기업 유치를 통한 대중·대세계 우회진출, 한-중 FTA내 경제협력 조항의 적극 활용 등 다양한 대응 및 활용전략 강구까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2 | 한-중 FTA의 업종별 활용전략

업 종		활용전략
전기전자	전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OPZ 활용
	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OPZ 활용
자동차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철폐 효과 별무 자동차부품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 간접 수혜
	부 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OPZ 활용
섬유의류	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변경, 공정변경 경제협력 활용 공간재배치, OPZ 활용
	의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 조치 활용 FTA네트워크 활용, OPZ 활용
석유·석유화학	석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철폐 효과 활용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품목발굴·개발) 투자유치
철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변경
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화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조치 활용 공간재배치, OPZ 활용
플라스틱·고무·가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조치 활용 공간재배치, OPZ 활용
농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NTB 완화조치 활용 공간재배치, OPZ 활용
소비재	내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반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NTB 완화조치 활용
	비내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재배치, OPZ 활용

